

# 광주시의회, 4천847억원 증액 추경안 의결

본예산 대비 6.4% 늘어난 규모  
지방채 전환 66억은 최종 삭감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지적에  
姜시장 “재정 상황 이해해달라”

광주시의회가 30일 제33회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7조6천43억원보다 4천847억원(6.4%) 증액된 규모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당초 4천807억원 증액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약 4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문제가 된 지방채 전환 사업 예산 2건(66억원)을 삭감 조치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105억원 가량을 반영했다. 예산 삭감 사업은 광천 에코브릿지 공모사업(2억1천만원), 송년 시민축제(2억원),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10억5천만원) 등이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이 1천200여원을 증액해 제출한 2조9천778여원 규모의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추경안 의결에 앞서 심철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당초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652억원 규모의 지방채로 전환해 의회 심의권과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목적에 정해진 기금과 특별회계가 일반 재원을 때우는 용도로 전용되고 공공기여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절차를 우회해 의회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의원은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광주시의회는 숫자와 회계기법으로 포장된 허상의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재정 편성은 시의 재량에 속한다”며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설명 자료를 통해 “통합기금은 회계·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 중”이라며 “예치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언제든지 집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심창욱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북구가 가장 열악함에도 52% 삭감됐지만, 광산구는 30%가량이 증액돼 형평성과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불균형한 교부금 운용은 시민의 이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썸짓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자치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가 현장실사 및 시민 체감도, 사업 타당성, 추진 시급성 등 교부 기준을 검토해 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고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의원은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광주시의회는 숫자와 회계기법으로 포장된 허상의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재정 편성은 시의 재량에 속한다”며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설명 자료를 통해 “통합기금은 회계·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 중”이라며 “예치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언제든지 집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심창욱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북구가 가장 열악함에도 52% 삭감됐지만, 광산구는 30%가량이 증액돼 형평성과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불균형한 교부금 운용은 시민의 이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썸짓은 의혹을 낳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자치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가 현장실사 및 시민 체감도, 사업 타당성, 추진 시급성 등 교부 기준을 검토해 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30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 가족친화문화 확산 '가족행복콘서트' 행사에서 공공기관, 기업, 전남가족센터협의회와 가족, 모든 사회 구성원을 존중하는 가족친화사회 실현 EFG 경영 선언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가족친화문화로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전남도 가족행복콘서트...실천전략 공유  
김지사 “가족 친화경영 제도적 뒷받침”

전남도는 30일 도청 왕인실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가족을 더 행복하게, 전남을 더 따뜻하게'를 슬로건으로 가족행복콘서트를 열어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본격 나섰다.

가족행복콘서트는 가족이 행복한 사회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전남도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도민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지사, 가족친화인증기업(관)과 가족센터, 시·군 관계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가족친화인증기관

판 수여, 세대공감 퀴즈쇼 '세바퀴', 가족중심 경영(EFG) 선언 등 다채로운 순서로 펼쳐졌다. 가족친화 유공 표창에선 무안군가족센터가 대통령 표창을, 도내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기여한 12명이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 신규 가족친화인증기업 33곳에 대한 현판도 수여됐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를 중심에 둔 가족친화경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한 가족친화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 신수정 의장 “빛 돌려막기로 재정 위기 극복 못해”

무분별 지방채 발행 관행 비판

광주시의회 신수정(사진) 의장이 광주시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관행을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장은 30일 제33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장은 “지방채에 의존하는 빛 돌려막기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장은 또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균형향 이 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시의 전략 부족이 아쉽다”고 광주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마스터플랜 재점검을 강조했다. 신 의장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부결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미술도시 거듭나야”

市, 포럼 열어 당위성·특화전략 논의

광주시는 30일 시립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포럼’을 열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주관한 포럼에서는 유치 당위성, 특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은 “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광주의 역사·문화·예술적 기반과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박한구 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장은 “세계 5대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곳이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인 광주에 현대미술관을 유치해 진정한 미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는 “30여년간 한국 현대미술의 혁신과 실험을 이끌어 온 광주비엔날레의 현장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전국 미술계에 확산시킬 국가적 파트너로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송암산단 콘텐츠 벨리 등 문화 인프라를 토대로 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사서관 등 3대 국립시설을 조성해 광주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 지방의원 징계·검직 현황 의정 정보 ‘한눈에’

행안부, 정보공개 항목 8→27개 확대

7월부터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검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공개했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8개 항목에 더해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 현황 및 검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공개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www.kiis.go.kr)’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김진수 기자

**올해 6월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특별 프로모션**

**최대 200만원 상당 혜택! | 기간 : 6/1 ~ 6/30**

상세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MAN1	MAK1	MAJ7	MAF1	MA32	MAC3	MAC9	MA22	MA05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